

집권 1년내 강력한 국방개혁 '드라이브' 예고

■ 새정부 국방정책 기조 변화

임기내 전작권 전환·복무기간 18개월 등 공약 지휘구조 재개편...사드, '속성 합의' 규명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취임 이후 국방분야 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선거기간 기자회견이나 대선공약집 등을 통해 '강력한 국방개혁'을 천명했기 때문에 취임 이후부터 개혁 과제들을 추려내 밀고 나갈 것으로 군 안팎에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집을 보면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2.0'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군사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이 큰 틀에서 이전정부가 추진해왔던 방향을 완전히 뒤집기보다는 일부 조정 또는 보완해 나가는 선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 국방을 책임진다'는 '책임국방'을 제시했기 때문에 자주적 국방강화에 비중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정부와 군, 정치권, 민간참여 하에 차기정부 집권 1년 이내에 후속 개혁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군 균형 발전과 통합전력 발휘 확대를 통해 미래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부지휘구조 및 인력구조, 획득체계, 무기체계, 군인 사기·복지, 국방운영제도 등의 핵심과제를 재선정했다고 밝혔다.

상부지휘구조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계획했다가 지금은 유야무야됐다. 합동참모본부와 합동군사령부로 개편해 육·해·공군을 지휘하고, 작전지휘권이 없는 육·해·공군본부를 작전사령부급으로 바꿔 각 군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부지휘구조 개편의 핵심이었다.

공약집은 "국방개혁 중장기 기본계획을 작성해 부대구조 개편 및 50만명으로 병력감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개혁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개혁 2020', 이명박 정부 때 '국방개혁 307계획', 박근혜 정부 때는 '국방개혁 2014-2030' 등의 이름으로 추진됐는데 새 정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부여해 개혁안을 내놓을 것이라 설명으로 읽힌다.

상비병력을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때 계획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 2022년까지 52만2,000명으로 늘려 수정됐다. 새 정부에서 다시 50만명으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2023년부터 연평균 2만3,000명의 현역자원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50만명 수준으로 병력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병사 복무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겠다는 것도 문 대통령의 공약이다. 복무기간을 줄이는 대신 전투력 손실방지를 위해 부사관을 증원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9일 오후 개표상황실이 마련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도착, 지지자들과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지지 감사
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복무기간 1개월을 줄이면 병력은 1만1,000명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게 되면, 출신을 저하로 병력도 50만명 미만으로 재설정해야 하고 그럴 경우 간부 인력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간부 인력관리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눈길을 끈다.

문민 국방장관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에도 검토됐으나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의 공약집에는 임기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실질적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한미는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오는 2025~2026년쯤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보다 앞당기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공약인 셈이다.

대선 공약집에서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략

사령부' (가칭)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배치비용 10억달러(1조1,300억원)를 한국이 부담해 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던 사드문제에 대해서는 배치철회를 요구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미간에 사드배치가 어떤 과정을 통해 갑작스럽게 합의됐는지, 이 과정에서 어떤 합의는 없었는지 등의 전말은 철저히 규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문, 집무실 '광화문' 이전 언제?

"시기특정 어렵지만 바로 논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9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의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구상이 언제 실행에 옮겨질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문 대통령은 현재 청와대 내에 있는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옮기고, 대통령 관저역시 광화문 인근에 마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시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위주의적 집무공간 구조를 개방적인 형태로 바꿔서 참모들과 수시로 소통하는 업무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인수위원회 기간이 없이 바로 대통령의 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문 대통령은 우선 청와대로 들어가 업무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수 대변인은 10일 "일단 청와대로 들어가서 광화문 청사 이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바로 시작할 것"이라면서 "다만 복잡한 대내외 상황들이 놓여 있는 만큼 시급한 사안을 먼저 처리하면서 이전방안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이전시기 등과 관련해서 "지금으로선 언제까지인지 확정해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 동안 문 대통령의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의 역사문화 벨트 위원회와 광화문 대통령 기거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각 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여기에는 대통령 관저를 서울 삼청동의 총리 공관으로 이전하고, 총리 관저는 세종 공관을 주로 사용하고 서울에 보조 공관을 두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정치검찰 안돼"...검찰조직 수술대 올린다

공수처 신설·검경 수사권 조정 등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됨에 따라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검찰의 명운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적폐청산'을 외치던 문 대통령은 그간 개혁의 첫 타격으로 검찰을 정조준해 왔다. 참여정부 시절 검찰개혁에 실패한 경험에 있는 문 대통령으로서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를 바로 잡고 '정치검찰'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확고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검찰 인사의 중립성·독립성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공약에서 가장 가시적인 것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다.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무

리한 기소를 하거나 불법 앞에 눈감는 행태를 대체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검찰은 공수처가 '육상육'에 불과하다며 반발한다. 지난 정권 검찰개혁을 위해 도입된 특별감찰관제와 상설특검이 실패로 돌아간 예를 들며 "새로운 제도를 계속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한 문 대통령 캠프 관계자는 "검찰이 제도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개

혁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불과하다"며 "개혁에 공감한다고 말하며 교묘히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여의도 정가에선 공수처에 대한 찬성여론이 반대의견을 압도적으로 웃도는 만큼 집권 후 가장 빨리 현실화할 수 있는 개혁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를 '문민'이 통제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외부인이 참여하는 검찰총장후보추진위원회와 검

찰인사위원회의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고 법무부 주요 보직에도 검사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수사와 관련해서도 객관적 혐의가 입증되면 기계적으로 재판에 넘기게 하는 독일식 기소법정주의를 도입해 검사의 재량을 줄이고, 시민들이 주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시민위원회도 법제화한다.

검찰이 부당하게 불기소한 사건을 다

시 판단에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재정신청'의 범위도 고소뿐 아니라 고발사건까지 확대된다. 재정신청이 인용될 경우에도 무혐의를 주장했던 검찰 대신 변호사가 재판을 맡는 '공소유지번호사' 제도도 부활한다.

검찰개혁의 가장 뜨거운 논란인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도 주요 공약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1차 수사권은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보증적 2차 수사권만 보유하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이는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경찰

을 광역단위 자치경찰로 조개는 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등 행사사법 체계 재편과도 연관이 있는 사안으로서 시간과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특히 경찰에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문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개혁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기관간 힘겨루기나 나눠먹기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 동안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은 무분별한 수사로 인한 피해를 막고 국민의 인권을보호를 위해 법률전문가인 검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경찰은 시대전진과 국민편의 증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사구조 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연합뉴스

주택용 태양광 (3KWH)설치시
- 가정용 누진 요금제로부터 해방
- 모을, 10년 품질보증, 25년 80% 출력보증

주택용 저압전력 사용량별 요금표 (2013.11.21 시행)	
100KW	7,350원
200KW	22,240원
300KW	44,390원
400KW	78,850원
500KW	130,260원
600KW	217,350원
700KW	298,020원

태양광 효과
→ 253,630원 절감 (월 400KW생산시)
→ 219,170원 절약 (월 300KW생산시)

태양광 발전사업(RPS)
- 고품화 사회의 노후준비를 위한 가장 안전한 사업
- 매월 월급처럼 안정적 소득 보장

50KWH 설치시 : 월평균 소득 180만원
100KWH 설치시 : 월평균 소득 360만원

월평균 일조량 3.6시간 기준
2016년 10월 3차 현물시장 평균가격 기준
건물위 설치시

(주) 금성에너지 010-2633-0890
광주시 광산구 사암로 171번길 40(우산동 광산우체국 앞)

SONY

방송 품질의 4K 및 Full HD를 제공하는 초소형 핸디 캠코더

모든 촬영 시나리오에 사용 가능한 소니는 전문가용 핸디 캠코더 PXW-Z150은 놀라운 4K 이미지 품질, 120fps HFR Full HD 슬로우 모션, 그리고 라이브 스트리밍 및 무선 워크플로우를 지원하는 고급 네트워킹을 제공합니다.

중고보상판매 실시

PXW-Z150 슬러드 스타이머 메모리 캠코더
HXR-NX100 1.0타입 CMOS 콤팩트 슬러드 스타이머 메모리 캠코더
HXR-MC2500 슬러드 스타이머 메모리 캠코더

SONY.CENTER 광주점 HD코리아(주) (062) 522-2000 350-8397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 94-180 판매전시장

직영서비스 센터 511-3000